광주·전남지역 교수 150여 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장병완 후보의 정책자문단이 22일 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왼쪽〉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과 광주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782명은 22일 오전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 오병윤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민주-민노 남구 지지세 확보 총력전

■ 7·28 재보선 D-5

장병완 '정책자문단' 구성… 시민사회인사 오병윤 지지

주말 지도부·중진급 의원 총출동 '세 불리기' 펼 듯

7·28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정책 자문단 구성과 지지선언을 통해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선거전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24일과 25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중진급 의원들이 대거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과 장병완 후보는 22일 오후 2시 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자문단 출범식을 가졌다.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동신대·광주교대 등 지역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은 장 후보의 공약 검증과 정책 보완을 통해 남구와 광주발전에 일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책 자문단장은 박광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조담·홍성우·한장희 교수(이상 전남대), 차용훈·신용진 조선대 교수, 신일섭 호남대 교수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정책 자문단은 출범선언문에서 "장 후보가 성공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문단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나섰다.

광주 각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782명은 22일 오전 11시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정신 구현과 새로운 정치지형 형성을 위해 야 4당, 시민사회의 단일후보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진정한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오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지선언자 명단에는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 이홍길 전 5·18 기념재단 이사장, 박화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송재구 전 광주시 부시장, 정동년 5·18 30주년 행사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고문, 임낙평 환경연합 공동의장 등 시민사회 인사가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주말까지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동영·박상천 등 중진급 의원들도 잇따라 장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박 원내대표는 22일과 23일과 1박 2일 동안 남구에 머물며 장 후보 지원유세를 벌이며, 23일에는 정동영 의원, 박상천 상임고문이 김영진·조영택·강기정·김동철 의원 등과 함께 주요 행사장과 거리 유세를 통해 장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주말인 24일에는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하는 집중유세를 갖고 대대적인 세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동당도 주말인 24일부터 투표일(28일) 전날까지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권영길 전·현직 대표단이 남구에 상주하며 밑바닥 표심을 겨냥한 '저인망'식 선거운동으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23일에는 야 4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국민참여당 정찬용, 진보신당 윤난실, 민주노동당 장원섭 최고위원 등이 오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비 민주당 단일후보 오병윤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구 선거인수 16만5719명

광주시는 오는 28일 실시하는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수를 16만5719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보궐선거 선거인은 지난 1991년 7월29일 이전 출생한 주민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인 7월9일 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다.

확정된 선거인에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이 67명 포함됐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선거인수의 20.87%인 3만4585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2만9644명으로 가장 적었다. 올해 처음 투표를 시작한 19세 선거인수는 332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오전6시부터 밤 8시까지 투표소를 운영하는 만큼 유권자들은 퇴근 후라도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性風·민간인 사찰 등 대형변수 속출

요동치는 재보선… 판세 혼미 양상

7·28 재보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 변수가 속출하면서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파문이 확산되는 와중에 한나라당이 민주당 이강수 고창군수의 성희롱 논란을 쟁점화하고 나서면서'성풍(性風)'의 진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국회의원 가족 불법 사찰 파문이 확산되면서 선거 판세의 유동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서울 은평을의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박영준 국무차장과 신흥 건설회사의 밀착 의혹을 폭로하면서 선거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선거야말로 국민 마음을 이해하고 서민생활 실정을 파악하는 장"이라며"너무 회초리만 들지 말고 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의혹 사건과 강성종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 소집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도덕성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주를 방문, 6·2 지방선거에 이은 '정권 재심판'의 필요성과 함께 '거대 야당 견제론'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정치인을 아우른 조직적 민간인 사찰 및 관련 자료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다루기 위한 국회 윤리위의 즉각 소집을 촉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막판 각종 변수가 돌출하면서 접전 지역의 판세가 더욱 혼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3~4개 지역의 경우,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당, 강용석 성희롱 파상 공세에

한나라, 강성종 불체포특권 협조 안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파문이 확산하자 한나라당이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강용석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한나라당을 '성희롱당', '성희롱 집성촌'으로 규정하며 연일 파상 공세에 나서자 한나라당은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발부시 불체포 특권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강용석 의원은 대통령 내외와 여야 여성 의원, 아나운서, 참석한 여자 대학생 등을 총체적으로 성희롱 대상으로 삼아 얘기했다"며 "한나라당이 선거 득실을 따져 국회 윤리특위를 지연시키고 제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성희롱당'이자 '성희롱 집성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강성종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7월에 방탄국회까지 소집했는데 부끄럽지 않느냐"면서 "한나라당은 그간 정치를 복원하고자 민주당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비애를 느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 라운지

도교육감, 교육 조례안 처리 협조 당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되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2일 도의회를 방문해 교육 관련 조례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이호균 도의회 의장과 임흥빈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로 조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일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조례안 일부는 학생들과 직접 관련돼 이번 회기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교육감의 요청도 있는 만큼 교육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오는 23일과 26일 상임위를 다시 열어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하고 의결할 예정지만 교육의원들의 참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 폐회 전날인 오는 26일 임 위원장과 박병학 교육의원이 만날 예정이어서 막판 조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의원 5명은 상임위원장과 간사직을 민주당이 독식하고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는다며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지역 예산지키기 농성

민주당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지키기 위해 21일 밤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국토해양부 장관 접견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예산까지 배정된 무안 현경~해제 간 도로확장 공사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무산됐기 때문. 확보된 75억원의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2일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크고 수십조의 예산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도로건설을 경제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키고 있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낙후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예산 마피아'의 농간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